

“소재·부품 국산화 지원·규제 완화해 달라”

문 대통령, 4대 그룹 포함 효성 등 30대 기업 총수·CEO 간담회 日 수출규제 장·단기 조치 공감...수입선 다변화 등 대책 모색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삼성·현대차·SK·LG·롯데·효성 등 총 자산 10조원 이상인 국내 대기업 30개사 총수 및 CEO 초청 간담회에서는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책을 놓고 기업인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이날 기업인들은 정부와 기업의 협력을 강조하면서, 장기적 차원에서 부품 국산화 등을 위한 정부의 지원은 물론 금융과 환경 등 규제 완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기업인들은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 장·단기적 조치의 필요성에 공감했다”며 “중장기적으로도 일본의 이번 조치가 양국 경제협력에 도움이 안 된다는 점을 민간 차원에서 설득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 기업인들은 정부·기업 간 협력을 강하는 한편, 부품 국산화에 대한 정부 의지에 공감을 표하고 긴 호흡의 정부 지원을 당부했다.

일례로 수입선 다변화나 생산시설 확충 등은 단기적으로도 개선될 수 있으나, 기술 개발의 경우 한층 시간이 필요한 만큼 정부의 장기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기업인들은 이번 사태로 그동안 일본에 대한 부품 의존도가 너무 과했다는 생각도 드러냈다. 특정국의 의존도를 낮추는 과정에서 대기업 간, 중소기업 간, 또 국부펀드 등 정부의 재정지원 사이의 유기적 협력의 필요성도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제조업을 뒷받침할 기초산업이 탄탄해야 한다”며 “이번 사태를 해당 산업의 뿌리를 내리는 기회로 삼겠다”고 밝히면서 수입선 등 조달망 다각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특

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면서 특히 화학 분야에 강점이 있는 러시아·독일 등과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업인들은 부품 산업 분야의 인수합병(M&A) 검토 필요성도 제시했다. 또 한국 경제의 ‘늪은 자본’ 문제도 제기했다. 부품·소재 분야로 돈이 흘러가지 않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금융 부문 규제 타파가 지적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경제계 주요 인사 초청 간담회에 입장하며 조현준 효성 회장과 악수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안병덕 코오롱 부회장, 김홍국 하림 회장, 조현준 회장, 박정원 두산 회장, 정기선 현대중공업 부사장. /연합뉴스

윤석열 공방 가열...野 청문보고서 채택 거부에 靑 재송부 요청

청와대가 10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가운데 윤 후보자의 거취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의 대립각이 커지고 있다.

여당인 민주당은 윤 후보자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검찰총장 적임자라며 청문보고서의 조속한 채택을 촉구하는 반면, 제1·2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윤 후보자의 위증 논란을 고리로 자진사퇴를 거듭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윤 후보자는 그동안 청문회 단골 주제였던 탈세, 위장전입, 투기, 음주 운전, 논문표절 등 무엇 하나 문제가 된 게

없다”며 “위증 문제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민과 함께 하는 검찰 총장을 위해서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반드시 채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윤우진 전 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하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변호사를 소개했다고 언급한 과거 언론 인터뷰 녹취가 공개되면서 위증 논란이 일었다.

한국당은 윤 후보자의 위증 논란을 거듭 문제 삼으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또 의원총회 등을 통해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윤 후보자가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 검찰 개혁의 길이고, 검찰의 명예를 지키는 길”이라고 밝혔다.

바른미래당도 적격·부적격을 병기하는 방식의 청문보고서 채택은 거부하겠다는 입장이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에서 “윤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에 부적격 의견을 낼 수밖에 없다”며 “윤 후보자는 공연히 정쟁을 유발하지 말고 자진해서 사퇴하라”고 밝혔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윤 후보자에게 특별한 흠결이 없다며 ‘적격’ 입장을 내보

이고 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인사청문회법 제6조 등에 따라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15일까지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의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은 사실상 윤 후보자를 임명하겠다는 의중을 내비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소득주도성장·추경 놓고 ‘난타전’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日 수출규제도 견해차

여야는 10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녹록지 않은 경제 상황을 놓고 서로 다른 해법을 제시하며 공방을 벌였다. 여당인 민주당은 우선 민생 지원과 경기 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조속한 처리를 강조했고, 자유한국당 등 일부 야당은 소득주도성장 등 경제정책의 전환을 요구했다.

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경제가 침체 양상을 보이는 상황에서 하반기 경기하강에 시급히 대비해야 한다”며 “민생을 챙기고 혁신성장의 불씨를 살리며 일자리를 만드는 추경은 긴급 규원투수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병욱 의원은 “경제는 심리이고, 정책은 타이밍”이라며 “경제에 대한 불안한 심리가 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빠지지 않도록 추경안과 각종 민생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당 광대훈 의원은 문재인 정부를 향해 “브레이크가 고장 난 고집불통 국정철차 같다”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이라는 쇠말뚝을 박아놓고 물 들어올 때 노 젓겠다는 허망한 낙관론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쓰아붙였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주

52시간 제도의 획일적 도입으로 국가 경제 곳곳이 타격을 받고 있다”며 “소득이 오르기는커녕 일자리와 소득이 사라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를 놓고도 여야는 견해차를 고스란히 노출했다.

김기선 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정권 2년은 오직 ‘과거 지우기’로 규정할 수 있다”며 “일본과의 경제전쟁까지 촉발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은 “일본의 수출규제는 현 정부의 무능하고 안일한 외교가 불러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이낙연 국무총리는 “일본과 경제전쟁 촉발이라는 말씀에 대해선 동의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또 “청와대에서 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빠지지 않도록 추경안과 각종 민생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또 “추가경정 예산안 증액에 합의하지 못하면 제2차 추경안을 낼 필요가 있는 게 아니냐”는 민주당 김병욱 의원의 질의에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관련 예산 1천200억원을 추가로 요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광주 찾은 평화당, 北 수영대회 참가 촉구

민주평화당 지도부가 광주를 찾아 현안사업을 점검하고, 2019광주세계선수권대회의 북한 참가를 요청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최경환 광주시장위원장, 장병완 의원 등 당 지도부는 10일 오전 광주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당 지도부는 이용섭 광주시장 등 광주시 관계자들과 함께 북한의 세계수영대회 참가를 요청하는 퍼포먼스를 연출했다. 정동영 대표는 “국제수영연맹이 아직 막까지 문을 열어 놓고 북한의 참가를 기

다리고 있다”며 “북한의 참가는 정상국 가로 가는 관문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이용섭 시장은 “지구촌 유일의 분단국가이고 대회 주제가 ‘평화의 물결 속으로’인 만큼 북한이 반드시 참가해야 한다”며 “안타깝게도 현재까지 북한의 긍정적인 답이 없다”고 말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광주시는 수영대회 후 소득세 감면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과 광주형일자리 성공에 필요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 등을 요청했다. /오광록 기자 kroh@

경찰 패스트트랙 충돌 국회의원 18명 출석 통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고소·고발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10일 수사 대상 국회의원 총 18명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경찰은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감금한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의원 9명에게 새로 출석을 통보했으며 지난 4일 까지 출석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았던 한국당 엄용수, 여상규, 정갑윤, 이양수 의원 등 4명에게도 2차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 또한 국회 의안과 사무실 앞 충

돌 상황과 관련해서도 더불어민주당 의원 4명, 정의당 의원 1명에게도 새로 출석을 요구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이들에게 내주 중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번 패스트트랙 고소·고발 사건을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감금 ▲국회 의안과 사무실 점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실 앞 충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장 앞 충돌 등 크게 4개 분류로 나눠 수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풍암동, 근린상가 매매/임대

- 서구 풍암동 664-6번지, 동부센트레빌 아파트 정문 앞 상가1층 101, 102, 109, 110호
- 분양평수 50평, 실평수 36평
- 현재, 대형 할인마트 입점중 (보 8천만원에 월300만원) 임대기간 만료후 월세 100만원 인상가능
- 매매 - 9억원
- 임대 - 보5천만원에 월세 400만원

신창동, 근린상가 매매/임대

-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 가도빌딩 (전남공업고 옆 사거리 코너)
- 4층중 2층 201호 전체, 건물170평
- 주위에 고등학교/대학교 단독주택 아파트 상업용건물등 혼재, 위치좋은
- 사무실, 병원, 헬스장등 모든 업종 오픈가능
- 감정/시세-12억
- 매매 - 8억 8천만원
- 임대 - 보1억원에 월400만원

문의. 010-6834-7400